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중앙부처·지자체 추진체제로 전환

산업부 관계부처 전담반 회의

지방시대·과기정통부 등 참여
지자체, 추가 인센티브 지원 건의
전력수전예정통지 비수도권 45%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협조해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토부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해남 솔라시도CC 내 홍보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투자협약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회의에서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진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도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지

역 입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통신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했

다.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을, 경상북도는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사업, 강원도는 수열 연계형 K클라우드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해당 프로젝트 현

황을 공유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은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관련 한전에 접수된 전력수전예정통지 중 비수도권 비중이 올해 6월 기준 45%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경북 포항, 전남 장성, 해남군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연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두산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공정위, 시정명령·벌점 2점 부과
22건 하자보수공사 위탁 위해 체결
미보증 극히 일부... 과징금 부과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해양디지털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협력

해수부, 아·태 지역 국제콘퍼런스
유럽·북미지역 전문가들도 참석

해양수산부가 11일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콘퍼런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해 유럽 및 북미지역 전문가들도 모인다.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해양 디지털 시장의 성장 △새로운 해양 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스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2일 참석해 회의를 낭독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동남아 3개국 쌀 2000톤 공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애프터)’를 통해 쌀 2000톤을 동남아 3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G7 정상회담과 이달 6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저장·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이다. 이번에는 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 등이 공여된다.

또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양성 초점

관련 학과 총 10개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춘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1일 폴리텍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및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를 비롯해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까지 283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착 도모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

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